

2.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 동향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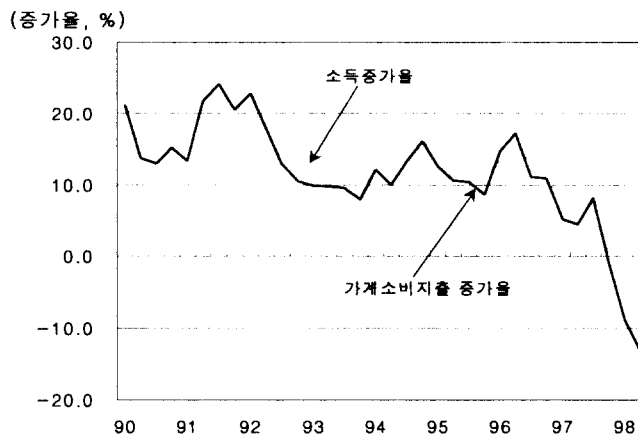
- (특징) 소비의 급속한 위축, 소득분배의 불균형 심화, 고소득층의 소비 위축 심각
 - 2/4분기 중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은 5.3% 감소한 반면 소비지출은 13.2%감소
 -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득 감소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증가. 또한 고소득층의 소비지출 감소가 여타 계층의 감소폭 보다 더 크게 나타남
- (향후 전망 및 과제) 소비가 소득보다 더 크게 감소하는 것은 자칫 디플레이션을 유발, 장기 불황에 빠져들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님
 - 신속한 구조 조정 마무리를 통한 불확실성 제거로 건전 소비 유도, 소득 분배 악화 방지를 위한 소득세 등 직접세 감세 조치 및 누적적 성격 강화 필요

□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의 특징

- 소비의 급속한 위축

- 98년 2/4분기 중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9.5만 원으로 전년 동기의 221.2만 원에 비해 5.3% 감소함
- 이에 비해 월평균 소비지출은 122.6만 원으로 작년 전년동기의 141.2만원에 비해 무려 13.2% 감소하여 소득 감소폭보다 소비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소비지출은 지난 1/4분기 8.8% 감소에 이어 그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민간의 소비 위축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2/4분기 평균소비성향은 66.1%를 기록, 사상 최저치를 기록함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및 소비 지출 증가율 추이>



- 소비 감소가 소득 감소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소비의 위축이 단순히 소득 감소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실업 가능성이나 소득 감소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소득 분배의 불균형 심화

-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득 감소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증가하여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 심화됨
- 상반기에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의 소득은 전년동기에 비해 14.9% 감소한 반면, 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는 오히려 2.3% 증가함
- 이는 IMF체제 이후의 고금리·고환율 추세에 힘입어 고소득층 계층의 금융소득이나 환차익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또한 비소비지출(세금이나 연금 등에 대한 지출)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의 경우 1분위부터 4분위까지는 소득 감소율보다 가처분소득 감소율이 더 커진 반면, 5분위의 경우 오히려 소득 증가율보다 큰 3.1% 증가를 나타냄. 이는 현재 조세 체계가 소득 분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 고소득층의 소비 위축 심각

- 유일하게 소득이 증가한 5분위 계층의 가계지출이나 소비지출 감소 폭이 여타 분위 계층의 감소폭 보다 더 크게 나타나 평균소비성향이 53.8%를 기록, 97년(61.1%)에 비해 크게 감소함
- 이에 비해 2~4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은 97년에 비해 1~2%p 하락하는데 그쳤고 1분위의 경우 오히려 크게 증가하였음
- 고소득층의 소비 감소는 소비 심리 위축에 기인하기보다는 고금리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기 위해 소비를 더욱 줄였기 때문임

<98년 상반기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 동향>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월평균 소득	78.5만 원	138.7만 원	185.4만 원	247.0만 원	432.1만 원
소득 증가율	-14.9	-8.8	-6.9	-5.5	2.3
가계지출 증가율 (소비지출 증가율)	-9.0 (-10.1)	-8.6 (-10.4)	-8.2 (-11.0)	-7.1 (-10.5)	-10.4 (-11.8)
가처분소득 증가율	-16.5	-10.2	-8.8	-7.6	3.1
평균소비성향 (97년평균소비성향)	107.8 (98.1)	79.4 (80.1)	71.5 (72.9)	65.8 (67.3)	53.8 (61.1)

□ 향후 전망 및 과제

- 소득 및 소비의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현재의 경기 침체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되고 실업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 가계의 소득 감소는 당분간 지속될 것임
- 또한 구조조정의 조속한 마무리가 지연되어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아 민간의 실업 및 소득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가계의 소비 심리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경기 불황의 지속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소비가 소득 감소보다 더 크게 감소하는 것은 자칫 디플레이션을 유발, 장기 불황에 빠져들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음

-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건전한 소비를 유도해야 함

- 최근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소비자 금융을 확대하고 특별소비세나 부가가치세 등 소비 관련 세금의 대폭적인 감면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소비의 감소가 소득 감소보다는 미래의 실업 및 소득에 대한 불안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감세 이전에 조속한 구조조정 마무리를 통한 경제 불확실성 제거가 급선무라고 할 수 있음
- 극심한 내수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의 경우 수십 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감세 조치를 취하였으나 국민들이 미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떨어내지 못해 늘어난 소득을 소비보다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행동을 보여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소득세 등 직접세 감세 조치를 실시하고 누진세적인 성격을 강화해야 함

- 소득 격차의 확대는 사회구성원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조세의 소득분배적 성격을 강화해야 함
- 이를 위해 소득세의 누진적 성격을 강화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중간 소득층(3분위) 이하의 평균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감안하면 역진적 성격을 가진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 감면과 더불어 소득세 면세범위 확대 등을 통해 이들 계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음

(이 보 성 bslee@hri.co.kr ☎724-4035)